



#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제도적 기반 마련

전주 생활권 전역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김 지사 "균형발전의 이정표... 전북 도약 발판"

전북특별자치도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권이 광역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이었던 기존 광역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정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향후 광역 교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서울과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해당 법률은 다음 주 중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

으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다양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 효자~김제·완주 간 도로 신설 및 확장, KTX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단위)'과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면서 권역별 교통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시도 간 협의체를 운영해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활용해 도로, 철도, 환승센터, 차고지 등의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고, 필요시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전북은 그동안 하루 약 40만 건에 달하는 완주·익산·김제·군산 등 전주 생활권 내 통행량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북권이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으로써 교통정책의 외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역교통망 구축은 단순한 교통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 전북 전체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돼 지역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도시권 지정 확대에 따른 국고 부담 우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며, "이는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의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에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북자치도, 올해 첫 추경 10조9801억원

본예산 대비 2522억원 증액... 민생 회복·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52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과 도민 안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총규모는 10조9,80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4% 증가했다.

최 부지사는 "연속적인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 순세계영여금과 예비비 활용,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창업기업 육성, 투자보조금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581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익산 스타트업 라운지 신설, 노란우산 장려금 인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미래차, 수소, 농생명 등 신산업 분야에 총 582억원을 투입해 산업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신설,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증대 등 지역 정착 및 생활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무주 지역 인공신

장실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 미배치 보건소에 의료 인력 투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로, 보행 환경, 교통안전시설 정비, 소방장비 현대화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집중 투자한다.

지난 2월 전주가 국내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번 추경에 94억원의 맞춤형 예산을 반영했다. 대국민 캠페인, 국제 스포츠계 교류 확대, 유치 타당성 조사 등 전략적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시와 예산을 분담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전북의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예산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예산만을 중점 편성했다"며, 추경 예산안 제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윤희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15일 도의회에 제출되고 오는 23일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

다. 이와 관련, 한 도민은 "전북자치도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으로 도민과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힘쓰는 만큼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4~5월

'OPEN-소방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15개 소방관서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OPEN-소방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OPEN-소방서는 △소방서 견학 및 소방차량 소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포토존'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소방서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펌프차, 고가차, 굴절차 등 다양한 소방차량을 활용해 차량별 기능과 성능을 소개하고, 탑승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연령대에 맞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방화복과 헬멧 착용, 공기호흡기 체험, 방수 체험, 구조·구급장비 작동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마련된다. 또한, 행사 현장에는 소방전시용 배너, 소방차량, 방화복 등을 활용한 '119포토존'이 운영된다. /이만호 기자

## '넘쳐나는 전자상거래 화물, 특송물류 선도 전략 다급'

전북연구원 이주브리핑... "복합물류 거점 육성 필요"

한중카페리 항로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등을 통해 전북지역 특송 화물 유입이 크게 증가 추세지만 물류거점기능 부족으로 연관산업의 선순환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이주브리핑 '특송물류 중심지 경쟁의 분석'을, 지금 전북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이란 연구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특송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정식 개장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가 월 80만 건 이상의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인프라 부족과 대기업 물류센터 부재로 인해 연관 산업의 지역 내 선순환 효과가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천 아임물류단지 완공 및 수도권 중심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확대에 따라 전북이 특송화물 거점 기능을 지속하려면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그 배경으로 전북자치도의 비수도권 유일 특송통관 독점성과 군산-시도 단위 항로 기반의 물동량 집중 구조, 새만금 트라이포트 인프라 연계 가능성을 핵심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를 활용한 Sea&Air 복합물류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특송화물 자율주행 실증, 스마트 통관 시스템 구축 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물류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만호 기자

